

형 법 (5 급)

(과목코드 : 132)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이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래에 파묻었는데 피해자는 모래에 묻혀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은 구타가 아니라 모래에 파묻은 행위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 ④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인정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2.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폭행치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사채업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협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③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낯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낯을 빼앗아 그의 가슴, 배, 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가 자상으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방어행위는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력으로 강간하던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고통을 느낀 피고인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해 정당화된다.

3. 부작위범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8조에서의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 ②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험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③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지만,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없다.

4.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의 산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④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 종료시를 의미하므로, 구법시행시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신법시행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5.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산모인 피해자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②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 ③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기사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사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7.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모해의 목적이 없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교사자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인정될 수 없다.
- ② 비신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한 경우, 그 비신분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④ 대항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 대항범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8.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피해자의 병증을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③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면 충분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가의 여부는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9. 몰수와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②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천만 원을 받았으나 그중 2천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피고인으로부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만 몰수·추정하여야 한다.
- ③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 ④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추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없다.

10.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다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3억 원에 매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이러한 횡령행위는 장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에 해당하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각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경우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11. 대법원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중학생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채점 기준표를 그의 누나로부터 받아 그 답안을 암기하여 해당 시험에 응시한 경우
- ②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③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 ④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 교수의 인솔 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들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한 결과 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된 경우

12.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는 공범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 할지라도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서가 될 수 없다.

13.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불이 해당 가옥의 벽과 천장에 붙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집 밖으로 피하는 바람에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②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③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고, 기본행위를 실행 중 한 사람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14.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들이 국가의 돈을 횡령하여 그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법령, 계약 등에 의하여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그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를 넘어 강요죄가 성립한다.
-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내부적 신임관계를 배신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15.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망을 통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받은 경우 「민법」 제746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더라도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6. 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예치하였다가 이를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② 절취한 차량임을 인식하고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인 차량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가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반한 자의 행위도 장물운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④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17.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 경우에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18. 대법원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운전자가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결과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 ②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③ 운전자가 전날 밤에 길에 세워둔 버스에 다음 날 05:40분경 시동을 걸어 출발함에 있어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바로 앞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 ④ 운전자가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19.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② 「민사소송법」 및 기타의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민사법령 및 기타 공법의 부지에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 ③ 피고인이 집달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의 관할구역 밖의 장소로 압류표시된 물건을 이전한 이상, 이로써 위 집달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법률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해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0.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 례 >

갑은 관장 을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을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을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을이 갑의 목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을과 갑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던 중 갑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이를 작은 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갑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갑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갑이 들고 있던 것은 휴대용 소형 녹음기로 밝혀졌다.

- ① 갑과 을의 다툼이 싸움으로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을을 도와 갑을 제압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 ② 싸움의 경우에도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정당방위에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흉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빼앗으려고 갑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흉기가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21. 폭행죄에서의 폭행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 ②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다.
22.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②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 ③ 종종 회장으로서는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종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도, 그것이 종종 정기총회에서 의사진행업무와 같은 1회성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지만,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 례 >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고, 공소외인은 피해자를 미행하여 2011. 11. 30.경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공소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그동안의 수고비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줄 테니 촬영한 동영상을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하여 범행에 나가는 것을 만류하였지만, 그럼에도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2011. 12. 9.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여자와 호텔에 들어간 동영상을 가족과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1. 12. 1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①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교사범이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 ②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③ 교사범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의한 이상 교사범은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없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실행한 이상 언제나 교사자로서 책임을 진다.
- ④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공갈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만류행위가 있었지만 공소외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와 같은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4.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상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는 없다.
- ②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乙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乙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乙은행에 신탁금지약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乙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 ③ 채권자인 피고인이 외상채권을 양도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부동산의 등기부상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지만, 부동산 중 1/2 지분은 타인 소유였던 경우에 매수인에게 명의신탁여부를 알리지 않고 매도하였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권남용행위를 한 경우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이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한다.
- ③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